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591호
2016. 12. 26

정책동향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시장동향

■ 상장 건설기업의 유동성 추이 분석

■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

산업정보

■ 2017년 국제유가 전망과 영향 요인

■ 미국 기업들의 트럼프 공약 평가와 전망

연구원 소식

건설논단

■ 재정 확대, 규제 혁신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시켜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¹⁾

- 「국가계약법」과 같은 보상 방식의 입법화 필요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계약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전장치

- 현재의 건설 생산구조는 하도급자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을 원도급자가 모두 감당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계약보증)은 이러한 생산구조에서 하도급자의 계약 이행을 유도하고 계약 불이행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임.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은 하도급자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로부터 계약 금액의 10%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음.
- 「하도급법」과 「건설법」에는 「국가계약법」과 같이 계약불이행시 보상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12년 8월 계약보증 약관을 정액 보상에서 실손 보상으로 변경하면서 ‘후속공사 증액분과 하자보수 실제 비용에 한정된 실제 손해액’으로 제한하여 보상하고 있음.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보증금 지급 지연 등으로 원도급자 피해 증가

- <표 1>과 같이 계약 불이행으로부터 원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원도급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하도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 청구 시 보상액이 청구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기 지연으로 원도급자의 손실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 특히, 정당한 보증금 청구에도 우선적으로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 보증금의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

<표 1>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보상률 추이

(단위 : %)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평균
보상률	건수	48.8	35.0	38.3	30.3	40.7	38.8	53.2	42.7	51.6	69.2	59.5	46.2
	금액	31.8	25.1	22.2	16.8	25.7	24.9	44.6	31.0	44.5	60.7	47.4	34.1

주 : 보상률은 지급 건수(금액)를 청구 건수(금액)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임.

1) 본고는 우리 연구원에서 발간한 엄근용·박용석(2016),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34호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국토교통부의 전문건설공제조합 종합감사 보고서(2016.5)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계약 보증금의 지급이 지연된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206일에 이르고 있음. 또한 보증금 청구액 전액을 받는 경우도 없음(<표 2> 참조).

<표 2> 보증금 지급 지연 사례

“삼송2초 외 1교 임대형 민자사업(BTL)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보증 채권자인 ㄱㄱㄱ(주)로부터 2014.1.17일에 발생한 손해액 2억 1,890만원에 대한 계약보증금 청구를 접수한 후, 2014.1.18일 ㄱㄱㄱ(주)에게 손해액 소명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구하여, ㄱㄱㄱ(주)이 같은 해 3월 28일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ㄱㄱㄱ(주)가 추가 자료를 제출한 2014.3.28일로부터 60일 이내인 같은 해 5월 27일까지 보증 청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계약보증금 지급 기한 2014.5.27일보다 206일이 지난 같은 해 12월 19일에서야 보증금 3,400만원을 지급함.
“광주수원 철근콘크리트 공사” 보증 채권자인 ㄷㄷㄷ(주)로부터 2012.7.27일 계약보증금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 자료 보완 및 계약보증금 청구 금액에 대한 협의 등의 사유로 계약보증금을 지급(2012.7.27~2014.1.15)하지 않자, 보증 채권자인 ㄷㄷㄷ(주)이 2014.1.16일 공제조합과 ㄱㄷㄷ을 피고로 계약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10.15일 패소²⁾ 이에 공제조합에서는 같은 해 10월 21일 원금 10억 8,260만원과 계약보증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 4,474만 2,000원과 소송 비용 1,760만원 등 총 12억 4,494만 2,000원을 보증 채권자에게 지급함.

자료 : 국토교통부 전문건설공제조합 종합감사 보고서(2016.5).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보상 방식의 입법화 등을 통한 정상화 필요

- 현행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 취지는 계약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원도급자에게 지급할 보상액을 줄이는 것이 아님.
 - 계약액의 10% 보증과 실손 보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보상액은 전체 계약 금액의 5%도 되지 않아 하도급자의 성실한 계약이행 가능성은 낮아짐.
- 하도급 계약이행보증 약관은 실제 손해액의 세부적인 보상 범위를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 범위’로 정하고 있음. 이는 보증기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채권자(원도급자)와 보증기관 간 분쟁의 소지가 큼.
-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 약관은 국가 등 채권자용과 민간 채권자용 두 가지로 나누어져 보상을 차별적으로 적용함.
 - 국가 등 공공이 채권자인 경우의 보상범위는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주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금액(정액 지급)으로 정하고 있으나, 민간 채권자인 경우의 보상 범위는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정의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계약법」과 같이 보상방식의 입법화로 계약 보증금 개념의 명확화 등이 필요함.

엄근용(책임연구원 · kyeom@cerik.re.kr)

2) 고양지원 2014가합****, 약정금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선고 2014. 10.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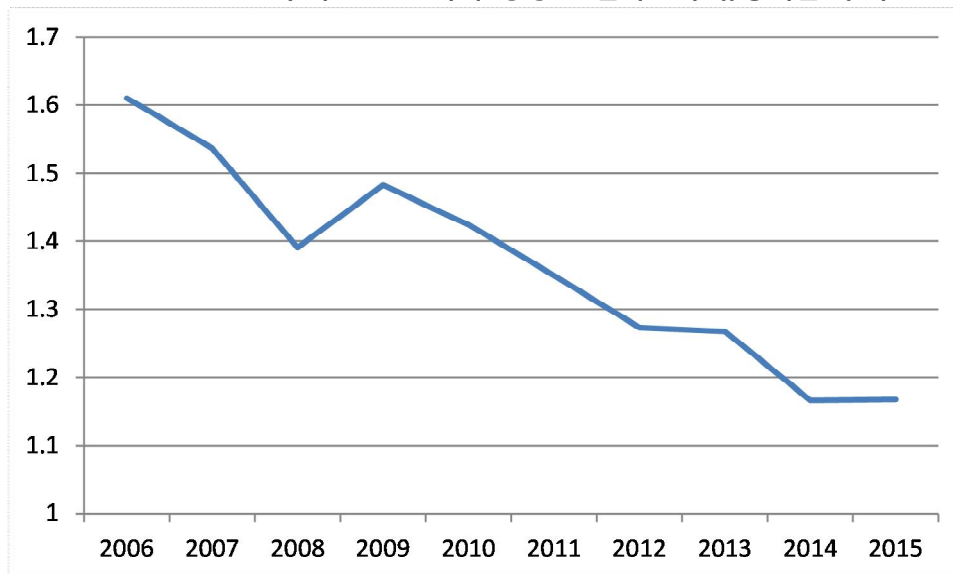
상장 건설기업의 유동성 추이 분석

- 유동비율 감소세,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대비하여 유동성 확보 필요 -

■ 상장 건설기업의 유동비율 감소세 지속

-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총 40개의 유가증권 상장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유동비율은 <그림 1>과 같이 최근 6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 2009년 1.48인 유동비율은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3년 1.27, 2014년 1.66, 2015년 1.68을 기록함.

<그림 1>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상장 건설기업의 유동비율 추이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유동비율은 기업의 유동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유동자산(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유동부채(1년 이내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나누어 계산함.
 - 유동비율은 기업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지불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기업의 자산이 많거나 수익성이 높더라도 유동성이 낮아 당장 갚아야 할 빚을 갚지 못한다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자산 규모 상위 50%에 속하는 기업이 자산 규모 하위 50%에 속하는 기업에 비해 오히려 유동비율이 더 낮게 나타남.

-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과 2014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자산 규모가 큰 기업이 더 낮은 유동비율을 보임.
- 규모가 큰 기업이라고 해서 높은 유동비율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규모가 큰 기업들이 특히 향후 유동성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표 1> 상장 건설기업의 자산규모별 유동비율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산 상위 50%	1.48	1.48	1.39	1.41	1.31	1.39	1.25	1.13	1.22	1.08
자산 하위 50%	1.74	1.59	1.39	1.56	1.55	1.31	1.30	1.40	1.12	1.26

주 : 자산 규모의 상위과 하위의 구분은 각 연도별 자산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였음.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순운전자본의 총자산비율도 5년째 감소세, 현금비율은 2015년 상승세로 전환

- 유동성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순운전자본의 총자산비율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그리며 유동성 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킴(<표 2> 참고).
 - 순운전자본의 총자산비율은 순운전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함.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 단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금을 나타냄.
 - 2015년 순운전자본의 총자산비율은 0.03에 그쳐 매우 낮은 수치를 보임.
- 현금비율은 2015년 전년대비 상승하여 개선된 수치를 나타냄.
 - 현금비율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 측정함. 여타 유동성 지표들에 비해 현금비율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임.

<표 2> 상장 건설기업의 유동성 지표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운전자본의 총자산비율	0.23	0.22	0.13	0.14	0.14	0.11	0.10	0.06	0.04	0.03
현금비율	0.19	0.16	0.13	0.17	0.13	0.13	0.12	0.17	0.14	0.19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안정적인 기업 경영을 위한 유동성 관리 필요

- 국내 주택시장의 위축과 해외 시장의 불확실성 등에 대비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 향후 건설경기의 하락이 예상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현 시점에서 미래에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원활한 자본조달을 위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임.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

- 공공과 민간 각각 78.9%, 33.2% 증가, 10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 -

2016년 10월 건설 수주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

-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국내 건설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여 전년 동월 대비 41.2% 증가한 14조 6,520억원을 기록함(<표 1> 참조).
 - 국내 건설 수주는 지난 9월 40.0% 급감하였지만, 10월에 다시 41.2% 증가함.
 - 수주액 14조 6,520억원은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76년 이후 10월 실적으로는 역대 가장 높은 실적임.

공공 부문, 전년 동월 대비 78.9% 증가

- 공공 수주의 경우 토목과 건축 모두 양호, 10월 실적으로는 지난 2009년 이후 7년 내 최대치인 3조 2,267억원을 기록함.
 - 결국, 공공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78.9%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함.
 - 토목 수주는 도로와 항만 등의 수주가 증가해 10월 실적으로 7년 내 최대치인 2조 5,600억원을 기록, 117.9% 급등함.
 - 주택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한 2,470억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수주는 10월 실적으로는 4년 내 최대치인 4,197억원을 기록, 3.5% 증가함.

<표 1> 2016년 10월 건설 수주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 분	총계	공공					민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15. 10월	10,378.5	1,803.4	1,175.1	628.3	222.8	405.6	8,575.0	584.6	7,990.5	6,353.4	1,637.1
2016. 10월	14,652.0	3,226.7	2,560.0	666.7	247.0	419.7	11,425.3	667.6	10,757.7	7,043.1	3,714.6
증감률	41.2	78.9	117.9	6.1	10.9	3.5	33.2	14.2	34.6	10.9	126.9
2015. 1~10월	107,445.7	20,366.5	14,264.2	6,102.3	3,010.1	3,092.2	87,079.1	10,712.6	76,366.6	52,866.2	23,500.4
2016. 1~10월	113,996.6	25,170.3	14,957.7	10,212.6	5,829.8	4,382.8	88,826.3	9,377.3	79,448.9	52,488.1	26,960.9
증감률	6.1	23.6	4.9	67.4	93.7	41.7	2.0	-12.5	4.0	-0.7	14.7

자료 : 통계청(민간 수주는 국내 외국 기관과 민자 수주액이 포함된 금액임).

■ 민간 부문,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하여 10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 기록

- 10월 민간 수주는 건축 수주가 매우 양호해 10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11조 4,253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33.2% 증가함.
 - 토목 수주는 민자 수주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2% 증가한 6,679억원을 기록함.
 - 주택 수주는 신규 주택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수주도 양호하여 10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7조 431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함.
 - 비주택 건축 수주 또한 상업용 건물 수주가 증가해 10월 실적으로는 역대 최대치인 3조 7,146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26.9% 급등함.

■ 세부 공종별로 건축은 모든 공종, 토목은 도로·철도·항만 등이 양호

- 건축 공종의 경우 모든 공종에서 양호했음(<표 2> 참조).
 - 주택 수주는 공공과 민간 모두 양호해 10월 실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7조 2,900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함.
 - 한편, 사무실 및 점포와 공장 및 창고 수주도 각각 143.2%, 192.5% 급등해 양호했음.
- 토목 공종의 경우, 기계설치와 발전 및 송전 수주는 부진하였으나, 도로와 철도 그리고 항만 수주가 양호했음.
 - 도로 및 교량 수주는 10월 실적으로 12년래 최대치인 1조 1,738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646.0% 급등함.
 - 철도 및 궤도 수주도 10월 실적으로 14년래 최대치인 4,615억원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121.4% 증가함.
 - 항만 및 공항과 토지 조성 수주는 지난해 수주가 부진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각각 1,879.5%, 187.8% 증가함.

<표 2> 주요 세부 공종별 수주액 및 증감률

(단위 : 십억원, 전년 동월비 %)

구분	건축					토목					
	주택	사무실 및 점포	공장 및 창고	관공서	기타	도로 및 교량	철도 및 궤도	항만 및 공항	토지 조성	기계 설치	발전 및 송전
2016. 10월	7,290.0	2,693.5	532.6	813.8	94.5	1,173.8	461.5	209.6	511.3	376.6	254.2
증감률	10.9	143.2	192.5	19.8	27.9	646.0	121.4	1,879.5	187.8	-24.8	-40.3
2016. 1~10월	58,317.9	17,177.7	7,417.6	5,547.7	1,200.6	6,983.4	3,304.2	1,617.3	3,543.1	4,401.3	1,748.4
증감률	4.4	11.7	89.5	-4.4	-20.0	177.6	-28.1	131.3	65.4	-45.3	-60.2

자료 : 통계청

박철한(책임연구원:igata99@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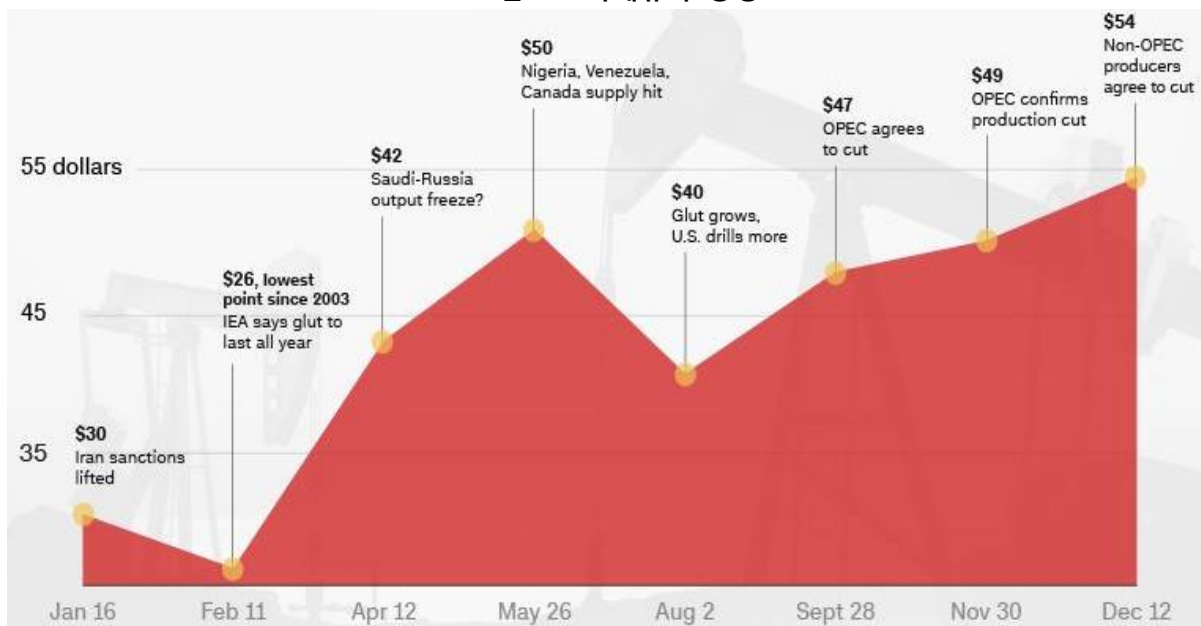
2017년 국제유가 전망과 영향 요인

- 국제 유가 회복세 뚜렷하지만 변동성 확대 요인 산재 -

■ OPEC 회원국과 러시아 및 멕시코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국제 유가 급반등

- OPEC의 감산 결정(11월 30일)과 함께 비OPEC 국가들의 감산 동참(12월 10일)으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급등세로 전환되었음.
- 3분기 기준 세계 산유량은 9,720만 배럴로 OPEC이 감산기로 한 120만 배럴과 러시아 및 멕시코 등이 감산 합의한 60만 배럴을 합친 총 감산량 180만 배럴은 전체 산유량의 1.8% 수준임.
- 주요 산유국의 감산 합의로 2014년 6월 배럴당 100달러에서 2016년 2월에 26달러까지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15% 이상 급등하였음(<그림 1>) 참조.

<그림 1> 국제유가 동향



자료 : CNN Money.

■ 2017년 국제유가는 배럴당 50~60달러 사이에서 횡보 예상

- 감산 합의로 인해 세계은행, 골드만삭스 등 주요 기관들의 2017년 예상 유가는 일제히 상향 조정됨.
- 세계은행(World Bank)은 OPEC의 감산 합의 직후 2017년 예상 유가를 배럴당 53달러에서 55달러

러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55달러로 예측했던 서부텍사스산 원유의 2017년 1분기 가격을 61달러로 수정 발표함.

- 또한 미국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은 2017년 예상유가를 이전 예상 가격보다 1.5% 높은 배럴당 52달러로 제시함.

● 국제유가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음.

-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와 유가 간의 커플링 강도는 과거와 같이 높지 않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뤄진 금리 인상인 만큼 유가 약세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과거에도 감산 합의가 미이행된 경우도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OPEC 및 비OPEC 회원국들의 감산 합의 실행 여부는 국제유가의 단기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 중에 하나임.
- 국제유가가 셰일오일의 손익분기점인 45~50달러를 넘어 6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셰일오일의 생산량이 단기간에 증가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음.
-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2015년 9.4백만 배럴에서 2016년 8.8백만 배럴까지 하락했으며 2017년에는 8.7백만 배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유가의 부진한 움직임 속에서도 셰일오일 생산이 지속되는 이유는 과거보다 생산성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정 가동 중단 비용이 유가 상승에 따른 혜택보다 크기 때문임.
- 이외에도 국제유가를 유지하기 위한 OPEC의 대응 방식, 글로벌 경기의 회복 속도 여부 등도 유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임.

■ 국제유가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해외건설 수주 실적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국제유가 회복세 지속이 올해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건설 수주에 반등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국제유가의 급락은 중동과 플랜트 중심의 기형적 수주 구조를 가진 국내 건설기업의 실적 급락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음. 때문에 국제유가 회복에 따른 재정 수입 및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경우 해외건설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임.
- 하지만 현재의 유가 회복은 미국의 셰일오일 반응 여부와 합의 실행에 대한 구속력 등에 따라 가격 상승폭이 좌우되는 등 단기 변동성이 매우 클 것임.
- 또한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석유산업의 근원적 변화에 따른 수급과 공급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건설 수주 회복에 대한 과도한 낙관은 금물임.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미국 기업들의 트럼프 공약 평가와 전망¹⁾

- 건설 투자 확대와 건설·에너지 기업의 규제 완화 등 친기업적 정책 예상돼 -

■ 트럼프의 미국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로와 교량을 포함한 인프라 부문에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당선 이후에도 인프라 재건 의지를 확인함.
 - 트럼프의 선임정책자문위원인 Wilbur Ross, Peter Navarro는 본 투자계획에는 1,670억 달러 규모의 민간자본 투입을 포함하고 있으며, 건설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이윤 및 근로자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1,370억 달러 규모)을 통해 투자를 유치할 것이라 밝힘.
 - 트럼프는 당선 수락연설에서 “도심을 고치고, 고속도로, 교량, 터널, 공항, 학교, 병원을 재건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인프라 재건(rebuild)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하였으며, 트럼프 당선 직후 Caterpillar, Fluor, AECOM 등 미국 주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였음.
- 그러나 트럼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공약은 실행 과정에서 의회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수립 또한 미흡한 실정임.
 - 오바마 행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주장해 왔으나 재원마련 등의 이유로 공화당이 반대해 왔으며, 트럼프가 추진코자 하는 연방 세액감면을 수반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있음.
 - 또한 당선 이후 트럼프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5년간 5,500억 달러 규모(당초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제시한 투자 규모의 2배)의 단기 인프라 투자 계획을 게재하였는데, 이 새 계획에는 교통 인프라만이 언급되었으며, 다른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포함되지 않음.

■ 미국 건설업계는 트럼프 당선으로 친기업적 정책 변화 기대

-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는 인프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의 엄격한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제 철폐 등 친기업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 건설협회(AGC) CEO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촉진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행정부 및 입법부와 협력을 희망한다”며, 노동협약 및 병가 의무화, 건설 작업자의 실리카 노출 제한 등과

1) 본고는 2016년 11월 글로벌 건설·엔지니어링 뉴스 전문지인 ENR에 게재된 “After Trump’s Win, Construction Gears Up for Policy Shift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같은 규제의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힘.

- 미국엔지니어링협회(ACEC) 역시 건설기업의 작업환경 법규 준수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 완화 등 각종 규제 완화를, 미국전기공사협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재산세 및 세율 인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친기업적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 미주리 주(州) 동부노동자연합 측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리카 규제와 같은 안전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음.

● 에너지 기업들 역시 화석연료 사용 활성화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등 트럼프의 자원개발 강화 공약에 따른 규제 완화 및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석유협회 CEO는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을 저해하는 145가지의 과도한 규제 및 정책의 수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변화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²⁾의 수정 또는 신규 제정을 꼽았음.
- 또한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단기로 결정한 Keystone XL사업³⁾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세일 업계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환경단체 Sierra Club은 트럼프의 자원개발 강화 공약에 대해 “기후변화협약과 온실가스 배출 억제제를 되돌리려는 시도에 대해 강경히 대응할 것”임을 밝힘.

■ 대규모 민간투자를 수반하는 인프라 투자 계획은 해외에서도 관심

● 해외에서도 상기와 같은 미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대규모 민간투자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가 추진될 경우 세계 주요 건설기업들의 참여가 예상됨. 그러나 구체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 및 정책 변화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다국적 건설엔지니어링 기업 Atkins는 미국 인프라 사업의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세금 감면을 반기면서도, 정밀한 판단을 위해서는 트럼프 측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제안이 필요함을 언급함.
- 영국의 부동산 건설그룹 Rider Levett Bucknall은 현재 미국의 정치적 변화 가능성이 높아 단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국제투자 감소가 예상되며, 이러한 자금조달 축소는 미국 건설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힘.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무역장벽 강화는 미국 외 시장에서 단기적인 건설자재 및 부품의 공급과잉 현상으로 이어져 미국 외 건설시장에서 일시적인 건설비용 하락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박희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2) 2015년 8월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안.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당초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음.

3) 캐나다에서 미국 중부 지역과 멕시코만에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 사업.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1월 온실가스 과다 배출 등을 이유로 연장 1,900km의 송유관 건설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음.

정부 및 건설 유관기관 회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12.09	국토교통부	• 철도시설안전과 주관,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영환 연구본부장 참여
12.14	국토교통부	• 건설경제과 주관, '하자담보책임 개선방안 자문회의'에 산업정책연구실 최만수 연구위원 참여
12.21	기획재정부	• '자체성과평가 설명회'에 산업정책연구실 허윤경 연구위원 참여
12.22	국토교통부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산업정책연구실 두성규 연구위원 참여

주요 발간물

유형	제목	주요 내용
이슈포커스	철강재 수입 규제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	• 최근 건설 현장 내에 설치하는 표지판 등에 주요 건설 자재나 부재의 원산지 표기를 의무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본고에서는 중국산 철강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건설 자재의 원산지 표기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 및 시장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안함. • 건설자재의 원산지 표기 규제는 '수입산'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KS 등 소요 품질에 적합한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재시공 요구 등 소모적인 분쟁이 우려됨. • 국내 철강재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과점(寡占)시장으로 만약 철강재의 수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수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이 우려되며, 이는 건설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 국내 형강 생산업체는 2개사에 불과하며, 철근 생산업체는 10개사로 상위 4개사가 전체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임. - 시공원가에서 철강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7~10% 내외로, 가격 상승 시 높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음. 만약 철강재 가격 50% 상승 시 건축 공종의 직접공사비는 평균 3.7%, 총공사비는 1.9% 증가하게 됨. • 한편, 제도 도입 시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은 물론 WTO 협정 중 원산지 규정 관련 협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크며, 파규제 상대국에서 비관세 장벽 등을 활용한 무역 보복 조치도 우려되는 상황임. • 철근이나 형강 등 건설용 철강재의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총 수요의 10~20% 수준을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입선(輸入先)과 유통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수입 철강재의 품질 확보는 수입 통관 후 보세창고에서 시험검사 후 출하하거나 혹은 수입선을 대형 철강업체로 제한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건설업계 연구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개최

- 연구원은 지난 12월 14일(수) 건설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 이날 자문위원회에서는 김현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부, 업계, 학계, 언론계를 대표하는 자문위원께 '2016년 연구사업 추진 결과 및 2017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을 발표하고, 위원장인 이상호 원장의 사회로 참석자 간 업계 현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재정 확대, 규제 혁신으로 한국경제 재도약시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교량과 도로 등의 인프라 투자에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입하고, 세금 인하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미국 경제의 부흥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의 미국 경제가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호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경제는 심상치 않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을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2.2%로 내놓았고, KDI는 금년보다 0.2% 낮은 2.4%로 전망했다. 전망대로라면 내년도는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현실로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케인즈학파는 불황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풀려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화주의자들은 재정정책으로 생산과 소득이 증가하겠지만,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가 감소하고 이는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구축 효과를 지적하고 있다.

내년도 국가 예산이 400조 5천억원으로 이른바 '슈퍼 예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내년도 국가 예산은 지출과 수입이 균등한 균형 예산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적자 예산을 의미하는 확장적 재정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면, 재정 적자를 감내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 경제가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누적 수준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최상의 경제정책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디에다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가. 우선, 재정이 불필요한 곳에서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꼭 사용될 곳에서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미래 한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분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 분야, 지진·가뭄·홍수·해노후화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즉, 산업 및 지역간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물 경제와 인프라 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보면, 투자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수도권내 대규모 공장 설립은 여전히 쉽지 않고,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의 경우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줄곧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격동하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때 경제는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으로 서민경제가 붕괴되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경제 정책의 추진을 기대해 본다.

박용석(산업정책연구실장 · yspark@cerik.re.kr)